

2023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순 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1
2. 전략적 목표체계	2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3
[전략목표 I]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한다.	3
① 성과지표 개요	3
② 2023년 측정결과	3
③ 성과분석	4
④ 향후 추진계획	20
[전략목표 II]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을 확립한다.	23
① 성과지표 개요	23
② 2023년 측정결과	23
③ 성과분석	24
④ 향후 추진계획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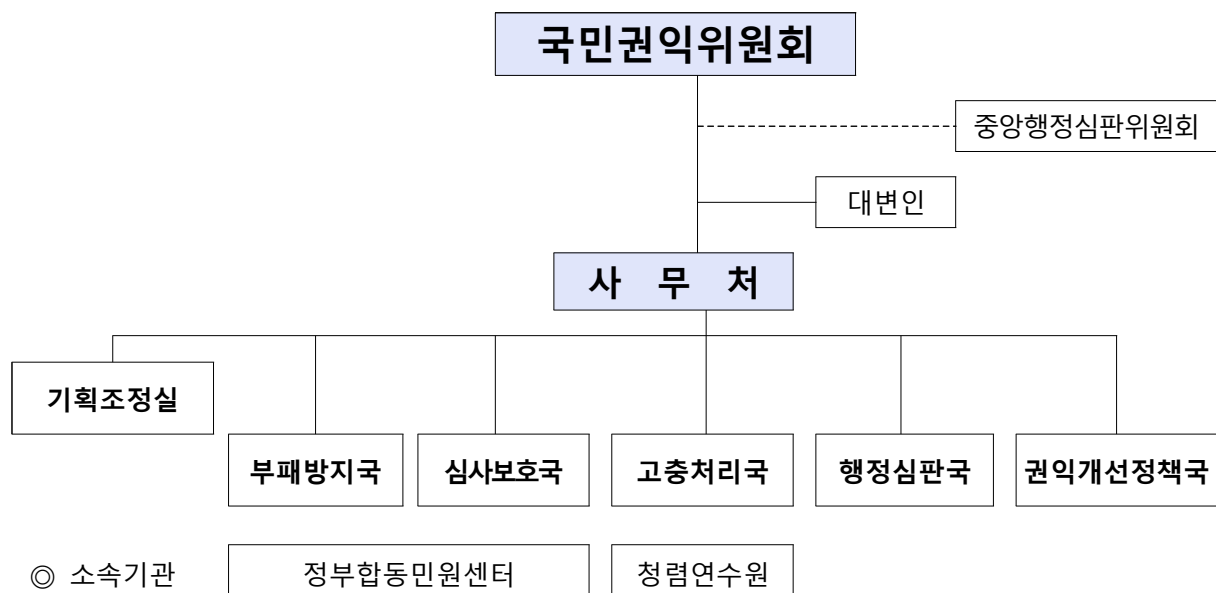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 국민 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핵심기능

부패방지	■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총괄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
고충처리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 의견표명 ■ 집단민원 조정해결, 빈발민원 기획조사
행정심판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 처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 추진
제도개선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정책참여 활성화 ■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 국민불편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조직도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비전	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	----------------------------

전략 목표	I.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한다.	II.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을 확립한다.
----------	--------------------------------	---------------------------------

성과 목표	I-1.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	I-2. 국민과 함께 정책·제도를 개선한다.	II-1.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청렴역량을 강화한다.	II-2. 신뢰받는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구축하고,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	-----------------------------------	-----------------------------------	---	---

관리 과제	1. 국민고충 적극 해소 2.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처리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1. 국민 중심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 2.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3. 국민불편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1. 공공부문 청렴역량 향상 지원 2.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 3. 공직자 청렴교육 지원 강화 4. 국제·민간분야 협력 강화	1.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2. 부패·공익침해 근절을 위한 신고처리 및 점검 강화 3.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 및 이행력 제고 4. 공정채용 정착 및 법령속 부패요인 제거
----------	---	---	---	---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I.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한다.

성과지표

국민고충 해결률

1 성과지표 개요

〈 국민고충 해결률 〉

- 개념 : 권익위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시정권고·의견표명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공공기관이 수용한 정도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대상 : 권고·의견표명 등을 받은 공공기관
- 조사방법 : 국민신문고 시스템·제도개선 관리대장에서 도출
- 측정산식 : ①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률(피신청인 수용건수×100/시정권고·의견표명 건수)과 ②제도개선 수용률(수용과제수×100/당해연도 제도개선권고 세부과제 건수)의 평균

2 2023년 측정결과

- '23년 '국민고충 해결률'은 94.7%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간 평균치인 94.3%보다 0.4%p 높은 수준입니다.
- 이는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한 권익위의 권고·의견표명의 약 95%를 공공기관이 실제 수용하여, 국민의 권익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과지표	실적					
	'18	'19	'20	'21	'22	'23
국민고충 해결률(%)	92.0	90.9	95.3	95.4	95.0	94.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의의 】

- 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를 통한 적극·공감행정으로 포용국가를 실현하고자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전략목표 성과지표를 '20년도에 추가로 설정하여 그간의 국민권익증진 정책 추진을 내실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전략목표 성과지표인 '국민고충 해결률'은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률'과 '제도개선 수용률'의 평균으로 산출되는 복합 지표로, 2개 지표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사안을 해결하고자 소관기관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한 사안을 '각 행정기관이 수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용률이 높을 경우 실질적으로 국민의 고충이 해결될 것이며,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권익위와 각급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도개선 수용률)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대상기관이 수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표의 실적이 높을 경우, 대상기관에서 권고사항을 실제 이행하여 고충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예정임을 의미하며, 이행 전에도 권고 취지에 부합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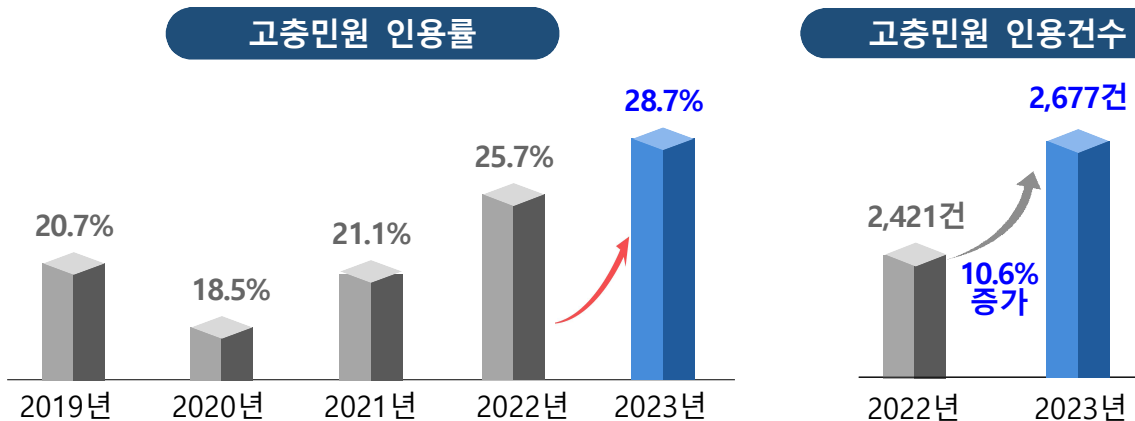
【 영향요인별 핵심 성과 】

-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의 발굴·개선, 지속적인 이행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익위의 국민권익 증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고충 해결률’ 지표는 ‘24년 최근 5년간 평균치인 94.3%보다 높은 수치인 94.7%를 달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높은 실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권익위의 아래와 같은 정책들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① 적극적 국민고충 해결

- (적극적 국민고충 해소) 행정기관의 소극행정과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 2,677건을 해결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용률 28.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집단민원도 중점 관리하여 ‘23년 총 177건을 조정·합의 해결하여 128,000여 명의 주민 숙원이 해소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인용률 : (‘20) 18.5% → (‘21) 21.1% → (‘22) 25.7% → (‘23) 28.7%



- 특히, ‘23.3월 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베테랑 조사관들로 구성된 집단고충조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3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전년보다 30건 증가한 63건을 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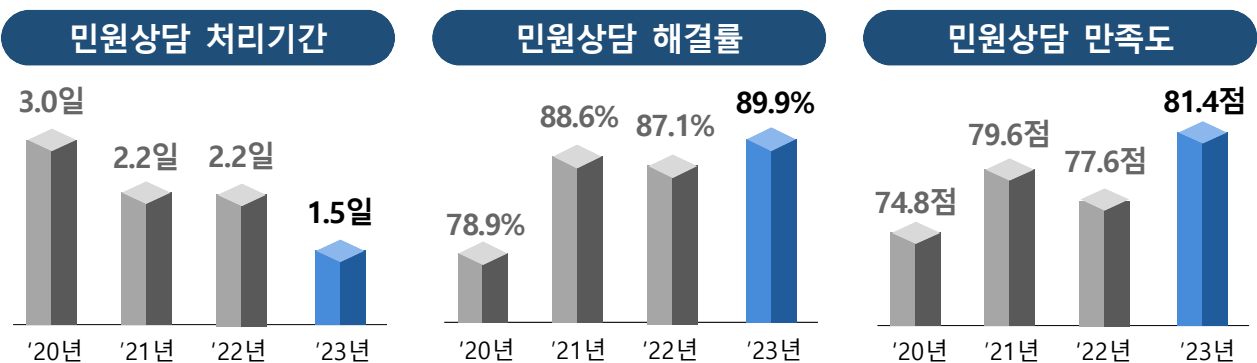
- (현장 중심 고충해소) 도서 지역, 농어촌과 같은 소외지역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현역 군 장병과 같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하였습니다.



- 지역형 40회, 맞춤형 64회를 운영하여 2,264명의 국민 고충을 상담하였고, 1,326건을 현장에서 해결하였습니다.

* 현장 해결률 : ('20) 51.8% → ('21) 52.7% → ('22) 55.7% → ('23) 58.7%

- 이와 함께 다양한 업종·분야의 일선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제도개선 권고, 고충민원 조사로 연계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충 해결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 분야별 민원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관, 콜상담사,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상담관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채널별 상담사례 분석과 상담관 역량 강화를 통해 상담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특히, 민원상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상담 해결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상담을 받은 국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는데, 이는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한 운영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상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온라인 민원상담 시스템의 오류 및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일 년간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결실입니다.

-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 구제) '23년에는 누구나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신속·공정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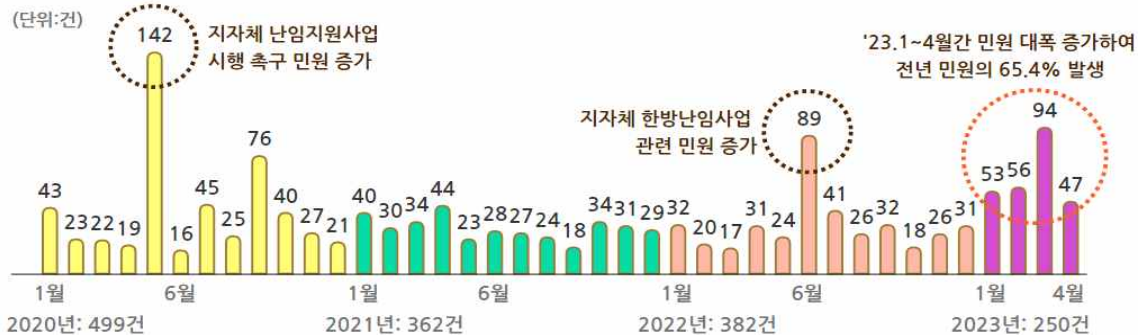
- 청구 단계에서는 처분 관련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청구서가 자동 완성돼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Easy 행정심판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중앙행심위, 시·도 행심위, 교육청행심위, 검찰청행심위 등 51개 기관에 행정심판 청구 시 이용 가능합니다.
- 조사·심리 단계에서는 특별안전전문위원회를 신설, 법률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에게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3년 구술심리 건수는 전년대비 36건 증가한 101건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의 효력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하고 타 행심위에 확산하여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했습니다.
- 재결 단계에서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욕설·비방만 있거나 주장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답변서 없이 재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처리 단계별 지연원인을 분석하여 재결기간을 약 15일 단축시켰습니다.

②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제도 개선

- (국민참여 확대)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대통령실 국민제안’ 등 국민소통 플랫폼에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견을 분석하여 권익위 또는 소관기관이 정책·제도개선에 반영(38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신청된 제안 중 43건을 정책화 과제로 발굴하였습니다.
- 또한,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국민패널은 도입 2년만에 가입자수가 2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 * (국민패널) 사회적 이슈나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 국민을 사전 모집단으로 구성해 ‘21.4월부터 ‘국민패널’ 운영 : (‘21) 9,156명) → (‘22) 16,199명 → (‘23) 21,998명
-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권익위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민원분석 및 데이터 활용·지원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국정과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난해한 사회현안 및 다양한 국민의 요구·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업 및 데이터 기반의 민원해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중점국정과제, 포스트코로나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강화, 청소년 재도약 지원, 주거안정 분야 등에 대하여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저출산(난임), 예비군 훈련, 소상공인 경제형벌, 자녀 양육·교육부담 완화 관련 민원을 주무부처와 협업분석하여 정책·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국정과제46. 관련 민원분석 주요사례 : 저출산(난임)

- 예비부모의 건강권(난임) 민원 1,493건 분석, 17건의 정책 제안사항 발굴·통보(복지부 등) -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23.10.17. 보건복지부 발표)

-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 빈발민원 분석을 통해 생활 속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격차 완화 및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발굴·개선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여 '23년 총 3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 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 주요 제도개선에 따른 정책효과 사례 >

정책효과 1 : 청년세대의 부담 완화, 미래 도약의 기회 증진

- (청년층 부담완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23.10.)
 - (추진배경)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 다수 존재
 - (현황) 공무원 채용은 사전등록 시스템을 통해 이미 5년 인정 중
 - (권고내용)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 성적 인정기간 확대 방안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

*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총 15개 시험

➡ (효과) 수험생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격시험 중점 역량 강화

- 높은 응시료 및 수 회 응시에 따른 수험생 지출 부담 대폭 완화
 - * ('23. 12월 기준) TOEIC(영어) 정기접수 회당 응시료 48,000원
- 자격시험 주요 역량 계발에 집중 등 수험생의 자격증 준비 효율성 개선

정책효과 2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23.11)
 - (문제점) ❶저소득층이라는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제한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 ❷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24회)가 충분치 않은 문제
 - (권고내용) ❶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규정 폐지, ❷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도록(최대 24회→48회) 복지부·건보공단에 권고

➡ **(효과)** 건보료 체납 예방, 급박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 체납 청산 과정에서의 부담 완화 등 취약계층의 보건권 적극 보호

- **(결식아동)** 결식아동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23.7.)
 - (문제점) ❶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정보 관리가 미흡, ❷급식지원 단가에 맞춰 식사 제공하는 음식점을 발굴·지원하는 등 결식아동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 미흡
 - (권고내용) ❶가맹점 정보 관리 개선, ❷결식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 음식점 홍보를 강화할 방안 마련을 지자체에 권고

➡ **(효과)** 결식아동 등 정책수혜자가 체감하는 지원 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민간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기반을 확충

정책효과 3 : 안전 사각지대 개선, 국민안전 강화

- **(전통시장 화재예방)**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23.8)
 - (문제점) ❶전통시장 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점포 지속 발생 및 이에 대한 적극적 재점검 절차 부재하며, ❷화재위험 점포로 판정됨에도 관리 담당인 지자체의 개선명령 시행 저조하여 화재위험이 방치됨
 - (권고내용) 점검 누락 점포 대상 재점검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 개정을 권고하였으며(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위험 점포 개선명령 시행 및 불이행 시 과태료·전기공급정지 조치 등을 통해 명령 이행 강화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였음

➡ **(효과)** 전통시장 안전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과정상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전통시장의 재산피해 방지 및 대외적 신뢰도 개선

정책효과 4 : 지자체 재정자립 역량 강화, 신뢰받는 지방시대 지원

- **(지방재정 개선)**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23.10)
 - (문제점) 지자체 회계·기금의 여유자원 관리 수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시, ❶입·출금 제한 없는 보통예금계좌를 사용하거나, ❷유휴자금을 저금리 유형 계좌(보통·공금계좌 등)에 방치하여 이자수입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재정 효율성 관리 미흡
 - (권고내용) 전국 243개 지자체에 ❶입·출금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 ❷유휴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내용을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함

➡ **(효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자금운용 상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방재정 개선 도모

정책효과 2-5 : 고질적 부패요인을 제거, 공정한 대한민국 실현

- **(공정한 채용)**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23.2.)
 - (문제점) 공무원 채용 면접점수를 획일적으로 비공개하여 공정성 의혹 야기, 면접시험 비리로 시험 절차·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
 - (권고내용) 면접시험의 성격·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면접 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권고

* (예시) 면접위원별 평가 등급은 비공개하되, 종합 성적(우수·보통·미흡 등)은 공개

➡ **(효과)** 공무원 면접시험 점수 공개로 연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응시생의 자기정보 알권리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공정·청렴사회 구현
(출처: 면접점수 공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 '23. 1월)

- **(갑질 타파)**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23.5.)
 - (문제점) ❶대학 내 갑질 실태 조사·평가 미흡, ❷신고 절차·기관에 대한 규정 부실, ❸내부 교직원 위주의 심사로 인해 불공정 우려 존재
 - (권고내용) ❶매년 대학별 자체 실태 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수립, ❷행동 강령 규정에 갑질행위 금지 명문화, ❸갑질신고 조사·과정에 외부 위원 참여 방안을 교육부, 국·공립대학에 권고

➡ **(효과)** 매년 증가 추세의 국·공립 대학 내 갑질신고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적 관심도 높아진 대학 내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청렴한 대학(원) 문화 조성

- (적극행정국민신청 권고의견 제시) '23년 총 3,840건의 국민신청을 접수받아 228건의 권고의견을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적극행정 국민신청

(단위:건)

기 간	접 수	의견제시
'21.7~12월	1,666	92
'22.1~12월	3,267	215
'23.1~12월	3,840	228
누 계	8,773	535

월 평균 의견제시 실적



< 주요 적극행정국민신청 권고의견에 따른 개선 사례 >

① 청년세대 불합리 개선

■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간소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5.4)

- ▶ (상황) 기간제교원 임용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 결과 서류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혼란 및 비용부담 발생
- ▶ (개선) ① 기간제교원 채용시 신체검사 면제규정 시행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하여 조기에 정착하도록 추진 ②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 후 6개월 이후 또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개선 방안 적극 검토

② 민생 회복 지원

■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절차 개선 (수원시, 4.19.)

- ▶ (상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역 보건소는 온라인 선착순 사전예약으로만 발급하고 있어 어르신 등 주민 이용 불편
- ▶ (개선) 만 60세 이상 현장 접수 실시, 예약시스템 예약절차 간소화 등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절차 개선('23.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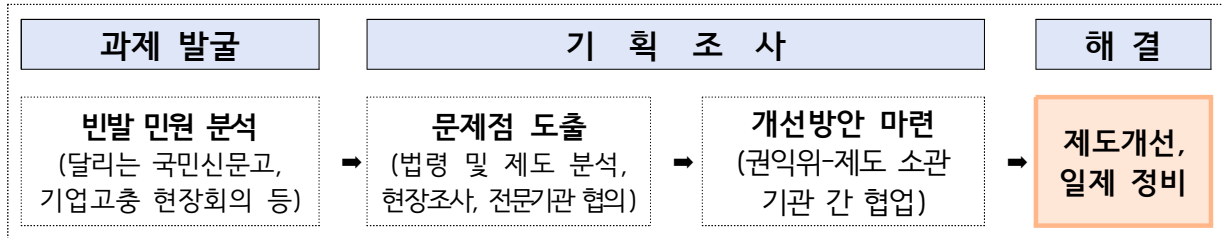
③ 소상공인 어려움

■ 특별관리대상 농약 구매 시 안전사용교육 이수방법 개선 (농촌진흥청, 7.6.)

- ▶ (상황) 독성이 있는 농약(훈증소독제, 에피흙)을 구입하려면 사전 안전사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추가 구매 시 동일한 교육(교육기관, 교재 등)을 다시 이수해야 하고, 그 마저도 일정수준의 교육대상자가 없어 기약없이 대기해야하는 불편 초래
- ▶ (개선) 최근 1개월 이내 구매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사용설명서, 팜플렛 배부' 등 안내자료를 통해 교육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에 행정 조치('23.9월)

- (생활 속 빈발민원의 근원적 제거) 생활불편·안전, 민생경제, 복지 등 일상 속에서 빈발·반복되어 발생하는 고충민원 과제 10개를 발굴하여 종합적 처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체계 >



빈발민원 기획조사 주요 사례

사례 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6.12) 신규사업

- (주요내용)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를 포함,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신고횟수 제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
- (장기적 효과) '불법주정차' 민원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민원 최소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근절 ⇒ 개선된 주민신고제 시행(7.1)

KBS NEWS

[이슈톡] 이달부터 강화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용은?

입력 2023-06-02 19:17:42 수정 2023-06-02 20:17:10



국정과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보호

사례 ④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표시 개선사업(12.5) 신규사업

인사처·행안부·국조실 공동주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11.8)

- (주요내용) 전국 시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과 협업체계 구축하여 노면표시 불일치 등 전국 교통사고 빈발지점 1,195곳 개선사업 추진
※ (예시) ① 차로 선형 불일치 개선 ② 차로 운영정보 불분명 ③ 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④ 노면표시 불량
- (장기적 효과) 도로 노면표시 전국 일괄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1,195곳 중 1,085곳(90.8%) 시설 개선 완료

서울경제

권익위, 전국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하기로...경찰청·교통공단 협업

입력 2023.03.22 16:02:43 수정 2023.03.22 16:02:43

권익위, 교통민원 1535건 분석
신호·노면표시 불일치 사례 개선



③ 적극적인 이행관리

-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관리) 입체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권익위의 권고가 최종적으로 수용되어 국민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서면조사, 현장점검 및 수용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불수용·미확정 394건 중 32건이 수용으로 전환되었고, 권고 등 수용률이 91.2%로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권고 등을 수용하였으나 장기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 598건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한 결과, 미이행 사안이 598건에서 370건 감소된 228건으로 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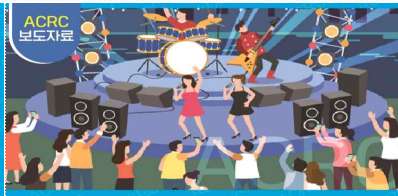
〈2023년 점검 전·후 비교〉



-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제도개선 권고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행실태를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미이행 과제가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맞춤형 이행컨설팅 등을 통해 전년대비 이행률이 향상(77.2% → 78.4%)되었습니다.
- (민원데이터 분석자료 활용점검) 주요 정책, 사회 현안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주 및 매월 단위로 분석보고서 「국민의 소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총 1,773개 기관에 제공(48회)하고 있으며 조치 현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리」 활용률은 전년대비 4.2%p 높아진 90.9%를 기록했습니다.

- 주기적 민원모니터링을 통해 증감분야, 신청인 현황, 기관·지역별 현황 등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우려 민원을 조기 포착하여 관계기관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발간 및 정기·수시예보 사례

민원 연간동향 발간	9월 정기에보(지역축제)	11월 수시에보(빈대)
 2022년 민원빅데이터 1,238만 건 분석결과	 '안전·바가지요금' 주의보 발령 지역축제 민원 분석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불편 사례' 조치 주요 사례

- **초등돌봄교실 확대**(국민의 소리 '23.2.2, 예보 3.7.)
 - 초등학생 돌봄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맞벌이가정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불편, 관련 예산 확보 요청
 - ⇒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증설,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증대 등 지속적인 확대 추진(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돌봄 대기 해소 방안 발표(5.17, 교육부)**

초등돌봄 대책 언론보도(5.17.)



- **스핀라자 급여기준 개선 요구**(국민의 소리 '23.4.6.)
 - 급여적용 불승인으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의 구제 요청
 - ⇒ 환자의 이의신청 인정, **급여기준 개선 입법 고시 (~9.25.) 및 시행(10.1.~)**(보건복지부 외 1개 기관)

제도개선 언론보도(9.22.)

SMA 치료제 '스핀라자-에브리스다'...10월부터 급여 기준 완화

무증상 환자 및 18세 미만 증상 발현 환자까지 적용 기준 확대
CHOP-INTEND, RULM, CHOP-INTEND, CHOP-ATEND 평가 최대 추가
개별 또는 기타 후유증의 발생 위험이 높음 - 필수성기는 잠재적 효과 고려



- **아파트 안전진단 요구**(국민의 소리 '23.5.11.)
 - 인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로 관련 집단 민원 발생
 - ⇒ LH와 건설사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하도록 감독하는 방안 발표(국토부)**

인천아파트 대책 언론보도(7.5.)

건설사, 주차장 붕괴 인천검단 1666세대 전면 재시공(종합)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노력 】

- (고충민원 갈등관리) 민원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사회적 현안과 관련이 있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고충민원은 추진 초기부터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갈등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언론 모니터링,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갈등을 해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갈등관리	(사례1)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전국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사례2) 전국에 산재한 장기 미등기·사정 토지 일제 정비사업
모니터링	▶ 언론보도(개선 필요성 확인) 한국일보 2019.04.05. 네이버뉴스 '악취·석면지옥' 여수 도성마을 개선 시급 한센인 정착촌 전남 여수 도성마을 주민들이 가족분노 악취와 석면 슬레이트, 산단에서 뿜어내는 매연, 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어 행정당국의 근본적인... 최무경 도의원, 여수 도성마을 악취·석면 문제 등... 시민의소리 2019.04.05. '악취·석면'대연 분진에 한센인들 신음...전... 뉴시스 2019.04.05. 네이버뉴스	▶ 언론보도(정비 필요성 확인) 제주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 매년 증가 (강) 박정현 기자 : 19 4월 2019.01.15 14:03 : 01111111 하동군 '땅주인 찾기' 100년 이상 미등기 토지 대상 (강) 박정현 기자 : 19 4월 2019.01.15 14:03 : 01111111
갈등조정 협의회 운영	▶ 개별 정착촌별 조정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8회) - 세종 충광마을(4.26, 8.4, 8.9, 10.12) - 한센요양시설 운영(4.21, 9.13, 10.5, 11.7) 한센요양시설 운영 현장조정(11.7) 	▶ 지자체 관계관 회의, 범정부 TF팀, 전문가 자문회의(2회) - 법무부 협의사항 회의(10.12) - 기재부 협의사항 회의(10.23) 기재부 회의(10.23) 
갈등 영향분석	갈등 당사자 유형별 갈등 요인 분석 ▶ (민-민) 정착촌 내 열악한 주거환경 및 무허가 건물 방치로 주민 간 갈등 발생 ▶ (민-관) 한센인요양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적용 등으로 갈등 발생 ▶ (관-관) 민원 해결 관련 법령상 근거, 업무 소관 등과 관련한 부처-부처, 부처-지자체 등 간 견해 차이 존재	
갈등 해소·완화 성과	▶ 한센인 관련 개별 갈등사안 2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어내어 갈등 해소 - 세종 충광마을(10.12), - 한센요양시설 운영 제도개선(11.7) ▶ 기초조사,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한 「특별조치법안」의 '법 제정 추진의 기반 마련' - 법 제정 핵심 부처인 기재부, 법무부가 권익위에 동의협조적 입장으로 선회	

-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 행정기관이 입안하는 정책에 대해 사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갈등요소를 차단 또는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또한, 정책 수립·집행시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 * 권익위 주관 또는 관계기관 협업 정책현안 국민의견 수렴(40건), '22년 22건 대비 18건 증가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리스크 관리 지원 사례

사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의견수렴 ('23.6월)

강력범죄 신상공개



Q1.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해야 할까요?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동의한다 96.3%

권익위 "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동의"

중앙일보 | 입력 2023.07.19 11:35

현역수 기자 구독

Q2. 범죄자의 최근 사진(머그샷)을 공개해야 할까요?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 95.5%

Q3.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해야 할까요?

아동성범죄, 윤치미 폭행 등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94.3%



국민의 소리를 통한 잠재적 정책리스크 분석

- ✓ 지나친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 ✓ 재범률이 높은 범죄, 반복성 범죄에 대해서 출소 이후 주기적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 ➔ (정책리스크)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 *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 (대통령주재수석 비서관회의, '23.6.12)

- (설문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96.3%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답변, 특히 95.5%가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 필요성을 지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동의 * 설문참여 : 총 7,474명
- (정책반영) 설문조사 분석결과 법무부에 제공, 중대범죄자 30일내 촬영한 머그샷 공개 의무화를 위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법) 제정(법무부, 10.24)

- (국민안전 이슈 예보) 권익위가 구축한 국민안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안전 위해사항을 도출하고, 피해발생 전 예보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 내부(민원) 및 외부(언론)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국민의 안전이슈를 자동 도출하는 국민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23.2월~)

- 특히, 국민안전 관련 이슈를 신속하게 포착하여 피해 발생 전 예보함으로써 사회·재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상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 예보발령 : 봄철 산불(2월), 음주운전(4월), 어린이 보호구역(5월), 아파트 부실시공(7월), 수해복구(8월), 지역축제(9월), 빈대(11월)

국민안전 예보 주요 사례

[봄철 산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민원예보 발령(2.9.)

< 최근 3년간('20~'22) 월별 평균민원 추이 및 발생 현황> <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민원건수>



[아파트 부실시공] 아파트 부실공사 징후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민원예보 발령(7.19.)

※ '22년 12월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2년 4월 ~ '23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708%증가



[수해복구] 집중호우 피해 및 수해복구 지연 등으로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예보 발령(8.25.)

※ 7월 '수해복구'관련 민원 총 25,378건을 모니터링하여 산사태, 제방붕괴 등 2차 위험 민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조치요청(30건 조치 완료)



← 조치 전
(도로유실 위험)

조치 후 ⇒
(보강 완료)



【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 (집단민원 조정 활성화) 전국에 산재한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간 표류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조정을 통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 '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단민원은 총 7,802건(중앙행정기관 1,169건, 지자체·교육청 6,633건)에 달함에도 권익위로 접수된 집단민원은 317건에 불과
- 이에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소관 집단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신청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안을 설명하여 입법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행정심판 통합 이견 조정)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의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통합에 있어 심리의 전문성 하락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 권익위에서는 심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및 위원 구성방안을 포함한 통합방안을 도출하고, 의견조회·자문·조정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매년 국민신문고 활용 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 등을 진단·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지자체는 평가대상에 포함되나, 공공기관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은 중앙부처,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 '24년도 실태점검시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 노력을 중점 확인하여 국민들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목표수준 】

- 국민의 고충이 실질적이고 종국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고충 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과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 5년 후에는 국민고충 해결률 95.6%를 달성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19	'20	'21	'22	'23	'28	
국민고충 해결률	90.9	95.3	95.4	95.0	94.7	95.6	국민고충 해결률은 '20년 큰 폭으로 개선된 이후 95%대를 유지해왔으나, '22년부터 소폭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5년간 점진적인 상승을 목표로 '28년 목표치를 95.6%로 설정

【 세부 중점 추진사항 】

I-1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

- 행정의 최종 AS 기관으로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연 12회 개최하고, 소외지역과 민원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활동을 연 100회 이상 개최하여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 민원을 조정·합의를 통해 직접 해결하고, 집단민원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여 사회적 갈등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 빈발하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빈발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고충민원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 한 번에 편리하게 정부관련 민원을 상담·처리하겠습니다.
 - 다수기관이 연관된 복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확인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근본적 민원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 센터 방문 민원인들의 생활 속 고충 해소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감정노동자인 상담사 보호를 위한 외부힐링(심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여 종국적으로 상담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국민 중심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 특별행정심판기관 대부분이 처분기관의 상급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심리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과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 편의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또한, 행정심판기관의 온라인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I-2 국민과 함께 정책·제도를 개선한다.

- 다양한 국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견 수렴의 통로로 국민 중심의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소통하고, 원스톱 민원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1,160여개인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2만 2천여명의 국민패널의 양적 확대에 맞춰 대표성·신뢰성 있는 국민표본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패널을 재구성하겠습니다.
- 주요 정책, 사회 현안 관련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안이슈를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예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세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자영업자·영세상인 등이 제기한 민원을 심층 분석하여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제도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보유 데이터를 융·복합 분석하여 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이고, 민원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과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및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의 기능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생각함, 토론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계적이고 촘촘한 제도개선 이행관리를 통해 제도개선 권고가 의도한 정책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 제도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고 실질적인 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이 일선 실무행정과 국민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을 확립한다.

성과지표

국가청렴도(CPI)

□ 성과지표 개요

〈 국가청렴도(CPI) 〉

- 개념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
- 조사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 조사대상 : 180개국
- 조사방법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결과를 실적으로 반영
- 측정산식 : WEF, PERC 등 개별 국제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 관련 조사결과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종합산정

□ 2023년 측정결과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24.1.30)한 '23년도 국가청렴도(CPI)는 180개국 중 32위,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았습니다.
- 전년대비 점수는 동일하고 순위는 1단계 하락하였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22위로 전년과 동일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 ('12~'23년)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점수		56	55	55	54	53	54	57	59	61	62	63	63
순 위	전체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9/180	33/180	32/180	31/180	32/180
	OECD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7/36	23/37	22/38	22/38	22/38

□ 성과분석

【 전략목표 의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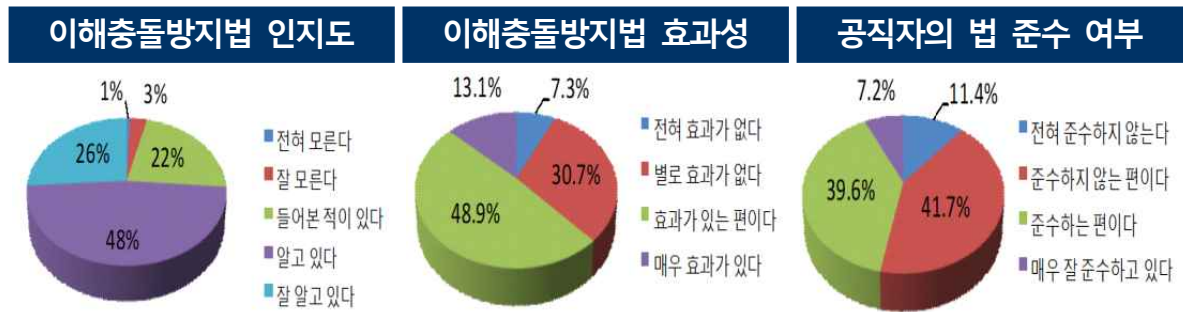
- 권익위는 지속적 반부패 개혁을 견인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반부패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국가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략목표 성과지표인 ‘국가청렴도(CPI)’는 국내에서 기업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인·전문 애널리스트들의 설문조사·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되는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 영향요인별 핵심 성과 】

- 국가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반부패·공정 관련 제도적 변화,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엄단,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향상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권익위에서 그동안 실행한 아래 정책들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① 반부패 행위규범 강화 등 법·제도 정비

-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공직자의 사익 추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22.5월)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여 부패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행위기준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19.~26., 2,017명 참여), 응답자의 74%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고, 62.0%가 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며, 46.8%가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도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신뢰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청렴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향상시켰습니다.
- (청탁금지법 규범력 확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금품수수자에 대한 조치 미흡 등 부적절 처리 사례를 확인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부패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비위공직자를 엄단했습니다.
- 공공기관 대상 실태점검 자료 요구·취합 및 사례분석(1~4월), 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기관, 제도 운영 미흡기관 등 18개 기관 대상 현지점검(4~5월)을 통해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공공기관(14개 기관, 24건)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개선)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한데, 권익위에서는 법령 등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종합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1,621개의 제·개정 법령을 입안단계에서 평가해 총 158건의 개선안을 발굴·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토착 비리 및 관행적 부패 예방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의 50,256개 자치법규를 점검하여, 지방의회, 기관 운영, 사업추진 등 3개 분야에서 2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2,199건의 개선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공공재정 부정수급 3단계 점검을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 (1단계 : 정기점검)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소행정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조치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정기점검하였습니다. '23년 정기점검 결과, 소행정기관에서 총 1,447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29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2단계 : 후속점검) 정기점검 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기관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 소행정기관의 '22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 처분(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후속점검하여, 총 200억 원의 제재 부가금 부과를 추가 권고하였습니다.
- (3단계 : 합동점검)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신고가 집중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국토부·농림부·지자체) 합동으로 유가보조금, 농업직불금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203개 지자체에 총 101억 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권고하였습니다.

* 유가보조금 63억원, 농업직불금 38억원 처분 권고(203개 광역·기초지자체 대상)

○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12.19)으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2.5배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권익위 반부패 법령간 포상금 지급 수준(최고5억원)이 통일되었습니다.

-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3.21)으로 국가·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수입회복·중대 등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가 대리 신고 이후 신고 결과의 이의신청도 비실명 대리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4.24)하였습니다.

② 부패취약 분야 실태조사

-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1월)하여 사후적발 중심에서 채용규정 컨설팅 등 사전예방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 행정기관내 비공무원(무기직·기간제근로자 / '20년 기준 약 42.8만명^{누계}) 채용관련 공통·상세 기준 부재에 의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3월) 하였습니다.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채용 관련 법령위반 및 부당 개입 등 총 130건 신고사건을 접수, 1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825개 기관)를 통해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피해자 14명을 구제하였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채용 특혜의혹,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공직유관단체의 자체규정 흠결에 따른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채용 관련 자체 규정(사규)상 법령·상위지침 위배·누락한 사항 등을 분석하여 354개 기관 대상 8,485개 항목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 (부패 실태조사) 적극적·선제적 부패 실태조사로 공직사회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였습니다.

공사 시설부대비 운영현황 실태조사

- (조사경위) 공공기관의 사업과 무관한 해외출장, 고가 등산용품 구입 등 시설부대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되어 부패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23.6~11}
- (조사결과)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 하는 등 부패 혐의에 대해 14개 공공기관을 적발, 총 12억의 부당집행 확인
- (사후조치) 해당기관·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감사 후 부당수령액 환수 요청하고, 관리감독·시설부대비 편성요율 등 문제점을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 요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숙박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 (조사경위) 단순 민원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부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국 8개 생태탐방원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 실시^{23.5~6}
- (조사결과)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숙박시설 사적사용 및 특혜제공 행위 14건 적발**
- (사후조치) 환경부에 **엄정한 감사 실시** 및 생태탐방원 생활관 운영 관련 제 도개선 요청,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브리핑**(8.2)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 (조사경위) '23.5. 국회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의결 등에 따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하여 특별조사 실시^{23.9~12}
- (조사대상)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재적 298명, '23.9.기준)
- (추진경과) 가상자산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 조사단」 구성,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 변동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 추진
-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현황 등록 여부 등 조사하여 국회의장에게 송부(12.28)

- (부패공직자 적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부패관행을 찾아내 척결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했습니다.
- 선출 권력인 시장·군수의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및 수수(3~4월), 수영장 등 체육문화시설 이용(4~5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특혜·비리 주요사건을 신속·중점조사하여 위반사항을 감독기관 통보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공공기관 대상 관계법령 준수사항을 전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의 눈앞에 부패관행이 사라진다*

보도시점 2023.4.20.(목) 10:00 | 배포 2023.4.20.(목) 08:30

‘일부 지자체장,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

- 청철장 작성·발송 등 직원에게 사적 노동도 요구
- 국민권익위, 감독기관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원에게 청철장 작성·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경조사 통지 관련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A지자체장) 5억 6천만원 보조금 수수 업체 등 직무관련자 200여명에게 경조사(모친상) 통지 적발
▶ (B지자체장) 공사 수의계약 건설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 100여명에게 경조사(자녀 결혼식) 통지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의 눈앞에 부패관행이 사라진다*

보도시점 2023.5.9.(수) 08:30 | 배포 2023.5.9.(수) 08:30

‘지자체장·지방의원,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

- 수영장 일부 미납, 회원증 발급·제시 없이 이용
- 국민권익위, 감독기관·지방의회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달리 점검시간이 끝난 점검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황제 수영장’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 (C지자체장 및 D지방의원), 지자체 소유 수영장 점검시간 중 단독 이용, 수영장 일부 미납, 회원증 발급·제시 없이 시설 이용 등 특혜 적발

③ 인식 요인

- (청렴교육 확대)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의무화('16.9월) 이후, 부패방지교육 이수 공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권익위에서는 효과적인 부패방지교육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 강사지원, 각급기관 부패방지교육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무교육 이수 공직자 수 : ('20) 162만명 → ('21) 174만명 → ('22) 176만명

- 또한, 청렴연수원에서는 청탁금지법('16.9월), 공공재정환수법('20.1월), 이해충돌방지법('22.5월)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정착을 위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역량 강화,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하여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특히,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고위직, 승진자, 신규자 등 공직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36회, 1,942명)하여 교육과정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교육과정(대상)	'22년		'23년	
	운영횟수	만족도	운영횟수	만족도
청렴리더십 과정(고위공직자)	16	91.4	16	92.3
승진자 과정(승진자)	8	91.8	10	94.3
신규자 과정(신규자)	10	90.6	10	93.7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과 함께 미래세대·청년 대상 청렴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의 윤리의식을 내재화하고 청렴을 미래세대의 일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을 57개교 7,16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예비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가치관 및 직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67명이 수료했습니다.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부패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배포(‘23.6월)하였고, 20개 공공기관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컨설팅, 심사 등을 통해 CP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 시범운영기관(Pilot Test) 주요 노력 사례 >

- 한국수자원공사 : 횡령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부패 리스크 식별·대응 및 경영관리 재무분야 위험신호 감지체계 마련
※ 총 17개사(국내 4, 해외6, 사무소7) 점검 및 인트라넷 시스템 내 위험징후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구축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 국유재산 관리 등 기관 특성에 맞추어 가계지원, 기업지원, 국유재산관리, 공공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전사적 식별

- (K-청렴 확산) 국제 반부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정의제 쟁점 사항 검토 및 협상 참여로 협정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권익위는 개도국 공무원 대상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반부패 정책 공유 워크숍 및 기술전수 협력사업을 제안했습니다.
-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및 성과를 모범사례로 보고 반부패 정책 개발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활용하는 국가나 기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국가 반부패계획의 이행과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한 부패 예방정책을 교훈 삼아 반부패 정책 추진에 활용하고 있고, 스위스 바젤 연구소는 부패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요 사례로 한국의 이해충돌법 제도와 추진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Anti-Corruption Policy Implementation: An Experience from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6, 2023

This report presents key lessons learned from the experiences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anti-corruption journey, through a discussion on the institutional set-up, national context, and policy development in the country. The Korean experience focuses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by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anti-corruption plan and introducing policy tools to respond to corruption by enhancing whistleblower protection, among other tools. Areas of commonality between Malay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also discussed in addition to policies that can be considered by Malaysia from the Republic of Korea's experience.

This publication benefited from substantive inputs and comments by the staff of the former National Centre for Governance,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NIGAC) of Malaysia,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P Seoul Policy Centre, and UNDP Malaysia. This publication has been possible because of the generous suppor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DP Seoul Policy Centre.

* 말레이시아에서 발행한 한국의 반부패정책 이행 경험(출처: UNDP, 23. 10. 6)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노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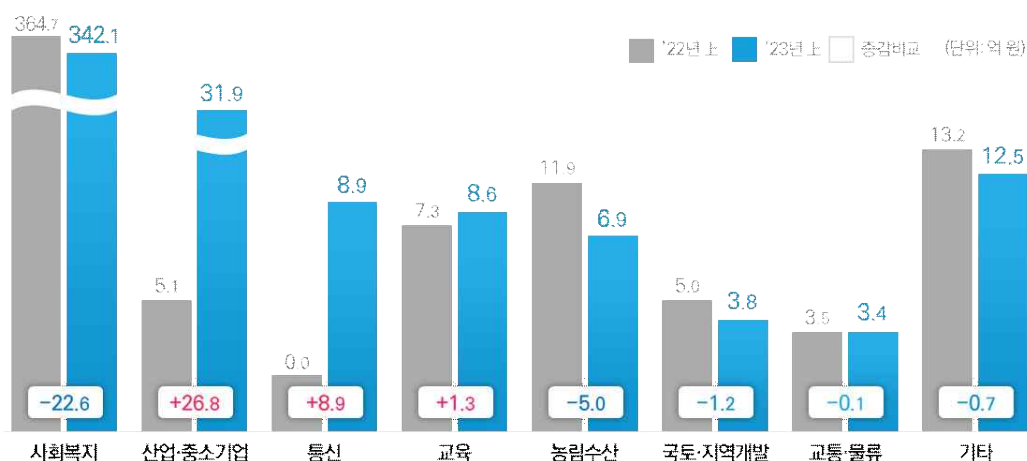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 선물 규제 개선) 경기후퇴 등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한 민생활력 저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농·축·수산업계 등의 피해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들의 소비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8.30)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선물 범위 확대	▪선물 : 물품만 가능	▶ ▪선물 : 물품 + <u>물품·용역상품권</u> ※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 제외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상향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 <u>10만원</u> 이하 ※ 설날·추석 기간 : <u>20만원</u> 이하	▶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 <u>15만원</u> 이하 ※ 설날·추석 기간 : <u>30만원</u> 이하

-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개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소행정기관 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확인되었습니다.

<'23년 상반기 환수처분 기준 권익위 이행실태 점검결과>



- '23년말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진정한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분야를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개선요인을 집중 점검·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안정화) 실태조사, 사례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제도 운영 관련 공통적 고충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업무 분야별 이해충돌방지 절차를 개선하고 업무방식을 명료화했습니다.

- 공직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을 조사·수사하게 되는 상황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달리 해석돼 국민적 혼란이 발생됨에 따라 수사·감사·조사 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이해충돌 상황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기준을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기존 수사·감사·조사 업무 관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신고·회피 의무 인식 미흡 및 불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개선 주요 상황을 구분해 신고·회피 의무 이행기준을 명확히 수립·안내하여 준수토록 함으로써 경각심 고취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또한, 공공기관 당연직 임원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업무, 승진·평가 관련 행정 업무의 신고·회피 의무를 합리화했습니다.

당연직
임원
관련

기존 당연직 임원은 산하기관 등 관리·감독 업무 수행 시마다 신고·회피 의무 이행으로 업무 비효율 발생



개선 법령·기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경우 공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회피 의무 이행 제외

-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조사) '23.5월 선관위 직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용세습·현대판 음서제라는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대두됨에 따라 비리연루자의 적발,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등을 통한 의혹 해소 및 신뢰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 권익위는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권익위·인사처·경찰청 조사관으로 구성된 37명 규모의 조사단을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의 최근 7년간의 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52일간 기초·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특혜성 채용, 합격자 부당 결정 등 채용공정성 훼손 사례 총 353건을 적발하여 28명 고발조치 및 312건에 대해 검찰청 수사 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 (국가청렴도 향상 방안) 권익위 주도의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적 위상에 비해 국가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략적·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10개 개별지수 중 전략적 관리 지수를 선정하여 대응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기관 현지방문, 주한상의 간담회, 애널리스트 정책 홍보 등 한국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청렴교육 확대 기반 확보) '16.9월 공직자 청렴교육이 의무화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시행으로 청렴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렴연수원 시설 및 조직으로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향후 교육시설·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조직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목표수준 】

- 반부패·청렴시스템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부패관행을 근절하여 5년 후에는 국가청렴도(CPI) 66점을 달성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19	'20	'21	'22	'23	'28	
국가청렴도 (CPI, 점수)	59	61	62	63	63	66	반부패·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20위권 내 진입을 위한 66점을 목표치로 설정

【 세부 중점 추진사항 】

Ⅱ-1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청렴역량을 강화한다.

- 공공부문 청렴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 과소평가된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체계적·지속적인 국내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각급기관의 청렴 수준과 반부패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등 반부패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렴 컨설팅 및 공직자의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내실화하여 공공부문의 청렴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직자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운영을 통해 현실규범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실태점검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국민 생활 속 행위규범으로 내재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일선기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취약 분야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수시 배포하는 한편, 공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 및 제도운영 현황 실태점검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설명회 등을 통해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부패 취약분야·기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행동강령을 공직자 실천규범으로 확립하겠습니다.

-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200만 공직자의 청렴의무교육('16.9월) 이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전문적인 청렴윤리경영교육을 확대 및 강화하겠습니다.
 - 최근 급증한 사이버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공직유형별로 차별화된 학습관리시스템(나라배움터, 청렴배움터)을 운영하고, 코스웨어 공동 활용 등 기관 협업을 통해 자체 청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직자들이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게 청렴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공연형·사례중심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청렴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 국제·민간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UN, G20, OECD, APEC 등 반부패 국제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반부패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와 정책을 개도국 기술지원, 공공기관과의 연계홍보, 영문 뉴스레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홍보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의 '공정'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청년 중심의 청렴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SG경영 및 글로벌 반부패 규범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민간분야 청렴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반부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증가하는 신고자 보호·보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일하는 방식 효율화 등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패·공익침해 근절을 위해 신고처리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패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실태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고사건 빅데이터 및 언론 분석 등을 통해 시급성·중요성이 높은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청렴포털 시스템 이용 불편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기능 개선을 실시해 부패·공익신고 처리수준을 향상·평준화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 효율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방산·건설 관련 공직자 등 비위면직자 입력 누락률이 높은 분야를 집중관리하고, 공공기관의 업무관련성 검토 및 대상자 누락 여부 확인을 위해 연 3회 실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금제한자 전수 조회,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국세청 기타소득 등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점검대상자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 5년차를 맞아 부정수급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이행실태관리 점검 및 후속점검, 취약분야 점검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및 보조금 누수 방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부정수급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국민 공개 및 재정당국 등 유관기관 공유를 통해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각급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 공정채용을 정착시키고 법령 속 부패요인을 제거하여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감독기관 부재 등으로 인한 채용비리 발생 위험군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415개 지방공직유관단체 채용 규정 중 법령·상위지침에 위배된 항목을 개선하여 채용비리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지방의회를 포함한 86개 시·군의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를 분석·검토하여 토착비리, 불공정 등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겠습니다.
 - 이행을 저조 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권고의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차관회의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등 효율적 사후관리를 통하여 개선권고의 이행률을 강화하겠습니다.